종부세 14억 놓고 당청 이견… 부동산 세금 갈등 재점화

민주당 "거주 상관없이 14억 적용"
청와대, 추가 수정에 부정적 입장
당청, 이달 말 최종 조율 시한


지난 8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일괄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거주자 우대를 골자로 한 기존 세제 개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의 이 같은 요구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2028년 4월 총선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고 있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세제가 당청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민주당 지도부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에 반대하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에서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상향한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한 차례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 차례 정책을 수정한 정부로서는 추가 양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엔 2028년 총선이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법안과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에 종부세 등 연이어 세금이 부과된다"면서 "(종부세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고,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며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 및 정책 일관성 기조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도 그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로서는 여당의 추가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는 인식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한도 14억원' 요청에 난색을 표하자, 당청 간 종부세를 두고 갈등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도정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1월 3~4주차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논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당정청 최종 조율 시한을 이달 마지막주로 제시했다.

이 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향후 당청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에 세제 개편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지역구에서 체감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민심의 압박이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특검법, 李 탈옥법"

청와대 앞서 국힘 최고위원회의
"대통령, 법안 수용할 경우 탄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이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규모와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죄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검사를 포함한 300명의 인원, 3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탈옥에 실패한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특검·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는 이 특검이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조작 수사로 감옥에 넣게 될 것"이라고 보탰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김민석 "구미 제조업 재도약 뒷받침"

구미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북 제조업 중심지인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해 있는 경북에서 구미가 AI(인공지능), 로봇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중심이 돼서 경북 전체 활력을 살리는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호텔 금오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경북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청년을 살리고, 구미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3000여 기업이 구미 국가산단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50여년 간 제조업 중심지의 역할을 한 구미는 전자기계, 장비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 재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